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

"성교육, 시대 흐름 맞게"

최영일 도의원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필요 학생 개개인 성인지 수준 사전에 파악해야" 주장

도내 학생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성교육을 하자' 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도내 학교의 성교육은 실질적으로 성과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전북도의회 최영일(순창·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38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시대에 따라 성폭력·성범죄 유형이 달라지며, 증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작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에 올바르게 행동하는 방법 자체를 배우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성폭력과 성범죄 예방교육과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몇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최영일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 등 다양한 매체들로 인해 학생들이 음란물을 접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디지털 성폭력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어 사회의 변화에 발맞춘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그는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요구에 맞는 실질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성 가치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성인지 수준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교사 개인의 성 가치관이 아닌 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 건강한 성 가치관이 형성되도록 학생 맞춤형 교육이 진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매년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를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성교육 지원센터와 디지털 성범죄 현황 파악·예방·근절 등의 종합적 대책 마련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영일 의원은 "성교육은 도내 아이들이 올바른 사회 진출인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면서 "제대로 성교육을 받아야 이성 간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할 수 있고, 성역할의 방향과 인식을 실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오는 10월 '전라북도교육청 성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조례에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들이 학교 성교육 활성화 및 방향성의 도모와 학생 눈높이 성교육, 성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도 포함돼 있다고 알려졌다.

"배달오토바이, 전기로 연료 바꾸면 대기환경오염 ZERO"

최영규 도의원

전북도의회 최영규 의원(익산 4)이 배달 오토바이로 인한 대기환경오염 및 소음공해도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도로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일산화탄소 약 31%, 탄화수소 약 23%를 내연기관식 오토바이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양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고, 미세먼지 배출량도 소형 승용차보다 2배 가까이 높아 대기환경오염의 주범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 그는 "소음 역시 105dB 수준으로 지하철 80dB, 열차 100dB과 비교해 오히려 높은 수치"라며 "내연기관식 오토바이가 우리의 도시환경 및 일상생활에 심각한 피해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내연기관식 오토바이로 인한 환경피해를 제로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기 오토바이의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등록 오토바이는 대부분 내연기관식으로 올 8월 말 기준 총 10만 900대정도다. 그러나 이중 전기 오토바이는 전체의 1.2%인 1,169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영규 의원은 "도내 14개 시·군 절반 이상이 도 평균 보급률(1.2%)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군산시는 2.3%, 257대를 보급했지만 장수군의 경우 0.2%, 단 4대에 불과해 시?군별 보급률이 많게는 11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내연기관식 오토바이 1만 대를 전기 오토바이로 전환하면 2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효과가 있다고 한다. 소음도 거의 제로에 가까워 대기오염과 소음으로부터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바꿀 수가 있다"면서 "전북도는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전북 14개 시·군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도가 지방비 일부를 도비로 지원하고, 충전시설 확충 및 대형 배달업체의 시범사업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도 전역에 전기 오토바이를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북경제 부흥, 군산형 일자리에 달렸다"

문승우 도의원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군산4)이 지난 10일 군산형일자리 성공을 위한 전북도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승우 위원장은 "전북도 경제를 지탱하던 현대조선소와 GM공장이 무너진 뒤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고 있고, 인구 180만이 무너진 것도 결국엔 일자리 문제"라며 "지역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군산형일자리는 꼭 성공해야 하고,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군산형일자리 전담팀을 신설하고, 전북테크노파크의 지역산업육성실을 군산으로 이전해 강소기업을 육성, 미래차 신사업에 대응할 전략 수립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것"을 제안했다.

또, 그는 "군산형일자리에 참여중인 기업 관계자들에게도 도민과 적극 소통해줄 것"을 요청하며 "그들이 전북도와 함께 성장해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를 희망하며, 적극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역경제의 기반인 군산경제가 무너진 뒤 많은 도민께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전북도가 도민의 답답한 가슴을 확 뚫어줄 군산형 일자리 성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인력개발원 지원 연장을"

나기학 도의원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나기학 의원이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 기능 유지를 위한 전북도 차원의 지원 연장을 촉구했다.

'전북인력개발원은' 1996년 개원 후 25년간 인재양성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해왔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 등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휴·폐원을 검토하던 중 2020~2021년 2년간 20억 원의(군산시 10억, 전북도 10억)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약 10억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한시 지원이 종료되는 2022년부터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나기학 의원은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이 2022~2023년 집중 투자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입주기업의 재교육을 담당할 전북인력개발원의 기능은 지속해서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지방재정 투자 과감하게"

강용구 도의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용구 의원은 전북도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지난 8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가 예산은 604조 4천억 규모"라면서 "지방재정에만 129조7,000억이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전북의 전체 지방재정 규모는 도청 9조9,077억원, 도교육청은 3조9,437억원으로 14조원에 가깝다"면서 "내년 정부 예산안 대로라면 내년도 전북 지방재정은 14조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북도청이 재정투자를 늘려야 하는 분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을 꼽았으며, 교육청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상처받은 학생들의 치유와 회복에 집중적으로 투자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다문화 정책 관련 공약 실천 최적의 후보' 전북도 여성 지지자 및 다문화 가족 구성원 911인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성과 보육, 다문화정책과 관련한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후보임을 밝히며,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지역상권 활성화·균형 발전 노력"

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위, 혁신도시 이전 기관장과 간담회

전북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조동용, 군산3)는 지난 10일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기관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위 위원들은 전북혁신도시를 방문, 9개 이전 기관장을 만나 개선이 필요한 정주 여건, 애로사항 등에 대해 간담을 갖고 상생발전방안에 대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국식품연구원 백형희 원장 등은 "이전기관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도의회와 전북도 및 시·군의 여러 지원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전북 발전과 2차 공공기관이전에 대비한 전북의 전략마련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용 위원장(군산3)은 "2차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지역차원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지혜를 구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며 "오늘 수렴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적극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며, 지역상권 활성화와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정수 위원(익산2)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은 실제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있다"며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등 국책사업 유치, 광역복합환승인프라 구축 사업 등 전북의 미래비전을 보여주고 있다"며 여러 공공기관의 지역상생발전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오평근 위원(전주2)은 "노조간담회에서 제기된 문제가 일부 개선으됐나 아직 미흡하므로 지속적으로 교통, 환경 등 정주문제 해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2020년 10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제2기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는 그간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노동조합 임원진과의 소통간담회,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향 청취를 위한 정세균 전 총리 방문, ▲충남도의회 및 내포신도시 방문을 통한 광역의회 간 상호교류 등의 현장 중심의 특위활동을 펼쳐 호평을 받고 있다. /유호상 기자